

빛가람혁신도시 북측 입체교차로 상반기 첫삽

전남도 교부세 20억 받아 착공 ... 2018년 말 개통 금천교차로 차량 정체 해소·정주여건 개선 기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대표적인 민원이었던 국도 1호선 북측연결도로가 올 상반기에 착공해 2018년 말까지 개통된다.

전남도는 31일 “지난 2008년부터 입체교차로 건설을 위해 국회, 정부부처를 설득한 끝에 지난해에서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받아 올 상반기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급증하면서 최근 출퇴근 차량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 국도 1호선을 거쳐 혁신도시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몰려 금천교차로에서 산포 입구 구간까지 정체가 심해지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남도는 271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빛가람혁신도시 개발 시행자



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투자해 입체교차로를 개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측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금천교차로 국도 1호선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는 등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전,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14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2014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2015년 말 1만2452명으로 1년 새 3배가 늘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월출동 영산강변

가족 야영장 만든다

광주시 북구 월출동 영산강대상근린공원에 가족단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30면 규모의 야영장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나는데로 공사에 들어가 7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등 8억원이 예상된다.

이 공간에는 강 주변을 따라 걷는 건강산책로, 정자, 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캠핑장은 영산강을 끼고 있는데다 20~30년생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등 나무숲이 잘 조성돼 있어 친환경 야영장으로도 제격이다. 또 승용차로 4~5분 거리에는 국립광주과학관이 자리잡고 있어 야영객에게 또다른 볼거리, 체험거리를 줄 전망이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가족단위 피크닉 및 건강한 숲을 주제로 한 체험형 야영장으로 조성해 온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소두증 ‘지카 바이러스 모기’ 퇴치 소독. 지난 23일(현지시각) 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도미니카 공군 병사들이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인 이집트숲 모기 퇴치를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측은 30일 소두증의 원인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를 모기가 옮긴 사례 1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 정책자문관제도 ‘옥상옥’ 될라

사무 공간·비품지원 등 명문화 ... 중요자료 유출 우려

“인원 2배 늘고 명확한 경비 규정없어” 시의회서 지적

광주시가 운영중인 정책자문관제도가 시의회의 ‘도마’ 위에 오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해 운영중이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만든 ‘정책자문관 운영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다가 민선 6기 들어 사무공간 마련과 비품지원, 공무원 자료 협조 등까지 운영 규정에 추가되면서 ‘옥상옥’ (屋上屋)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광주시와 시의회 주경남(서구 4)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7조)에 자문관이 자료 요구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난해 말 신설했다. 여기에 원활한 자문활동을 이유로 사무공간 및 비품 지원도 명문화했다.

주 의원은 “이 규정에 따라 시의 중요자료가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며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두거나 정보 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문관에 따라 상당수 내부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시청사(46㎡)안에 4000여만원을 들여 자문관 상주 공간까지 만들었다. 현재 시 청사는 가뜩이나 비좁아 공사물 사무실을 운영중이다. 이 자문관실은 공무원과 시민들의 편의 공간을 전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현재 위촉·운영중인 정책자문관은 대외협력, 민자도로, 중국교류협력, 비전·투자 등 15개 분야의 15명이다. 민선 4~5기에는 많아야 7~8명 수준

이던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책제 및 실적제로 경비를 받고 있으며 지급된 총액은 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 의원은 “지원하는 경비도 시와 협약을 통해 하도록 할 뿐 명확한 규정도 없다”며 “월정액도 자문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자문관은 지방선거 당시 운전자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로, 자문관제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정무특보, 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선거캠프 인사가 공조직에서 자리를 차지한 마당에 정책자문관 제 확대는 공조직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어떤 자문관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운영효과도 명확하지 않다”며 “옥상옥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남동 인쇄업 도심형 특화산업 키운다

국비·지방비 5억 지원

광주시가 문화산업의 기반인 인쇄업을 도심형 특화산업 집중 육성한다.

시는 지역 인쇄업계 성장·육성을 위한 인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청 소공인 특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문을 연 광주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올해도 국비와 지방비 등 5억여원을 투입, 10인 이하 인쇄업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부문은 역량강화 교육, 작업환경

개선,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 등이다.

광주시 동구 남동 일대에 밀집한 인쇄업체들의 낙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업체당 500만원 한도 지원금도 지급된다.

오는 9월 광주 인쇄기술 경진대회, 10월 인쇄인의 날 등 행사를 열고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 홍보관을 갖춰 인쇄물 전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병천 시 문화산업과장은 “호남 최대 인쇄산업 집적지 400여개 업체가 밀집해 있는 광주 동구 남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도문화관광 브랜드 이름 지어 주세요

광주시 이달말까지 공모

광주시는 2월말까지 남도문화관광 브랜드 이름을 공모한다.

광주의 문화관광 내용을 함축하고 전문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이면 된다. 응모 자격 제한은 없으며 1인당 2건까지 출품할 수 있다.

창의성, 상징성, 상품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 장려상(3명) 각 50만원 등 총

26개 작품에 750만원의 상금을 준다. 수상작은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천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확장, KTX 호남선 개통 등을 계기로 적극적인 문화관광 마케팅과 문화예술상품을 홍보하고 예방, 의향, 미향의 광주를 알리고자 하게 했다”고 말했다. 참조 광주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 문의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실 (062)613-342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방정가

이은방 “초등 수영수업 안전사고 예방 최선을”

광주시의회 이은방(북구 6) 의원은 지난 31일 올해 광주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전면 확대되는 초등학교 수영 수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한정된 장소에서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전요원과 수영강사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광주시와 각 자치구의 수영장 실태 파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분산 교육을 실시해서 내실있고 안전한 수영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상필 “학교 등 공공시설 유희공간 개방 저조”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3) 의원은 지난 31일 “광주시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 등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한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공공시설의 공유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분청과 지원청, 14개 직속기관 중 단 3개 직속기관만이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공유 공간도 강당에 국한되어 있다”며 “2010년 ‘광주시교

육청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강당, 회의실, 시청각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시민과 공유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 개방 건수는 2013년 3건, 2014년 8건, 2015년 7건으로 집계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 (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보이지 않는 보청기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